

1994 환경보도 결산



황보영춘

(문화일보 생활과학부 차장)

94년 환경관련 보도는 정초에 터진 낙동강 식수원 오염사고로 막이 올라 상반기에는 연이어 터진 대형 수질사고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하반기에는 북핵문제 등 남북문제와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비롯한 각종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 환경보도는 설 자리가 그만큼 좁았다. 이 틈에서 김포쓰레기매립장 부실 운영에 관한 문제가 불거져나와 하반기 환경보도를 마무리한 셈이다.

보도자료 인용 기사 많았다

지난 1월 3일 경북 달성군 수도사업소에서 내보낸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됐다. 언론들은 이 사고에 관한 기사를 20여일간 집중보도 했다. 하지만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제기된 환경보도의 한계가 이때도 되풀이됐다. 풀이하면 현상위주의 단편적인 스트레이트기사가 주를 이루었고, 사고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독창성 있는 분석, 기획기사는 드

물었다. 이어 4월에는 영산강물 오염으로 취수가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고, 6월에는 낙동강 농약 유입으로 인한 취수중단과 포항 유봉산업폐기물처리장 붕괴사고로 인한 영일만 오염, 7월에는 대구 성서공단 폐유 유출사고로 경남 칠서정수장이 취수를 중단하는 사고가 있었다. 같은 유형의 대형 환경사고가 5건이나 연속적으로 발생한 일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는 91년 3월에 발생한 낙동강 폐놀사고의 재현을 보는 듯한 양상으로 흘러 국내 언론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접근, 보도해야하는가 하는 과제를 남겼다.

5월에는 정부가 생수시판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발표를 하자 △생수오염실태 △생수판매문제점 △지하수관리와 오염실태 등에 대한 후속보도가 많았다. 이는 수질오염사고 때와는 달리 환경보도의 진가를 높인 알찬 내용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김영삼정부의 출범 뒤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환경규제마저 느슨하게 하는 조치가 94년도에도 많이 나왔

으나 이에 대한 보도는 3-4건에 불과했다. 일부 환경기자들은 신경제정책으로 환경정책이 후퇴한다는 기사를 송고했으나 기사화되지 않았다고 밝혀 아직도 환경보도가 직·간접으로 통제받고 있지 않나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기돼야할 문제점은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반비례관계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80년대의 이론이다. 그런라운드 돌풍이 분 90년대부터는 환경보전정책은 경제발전에 비례되고 있음이 부인할 수 없는 국제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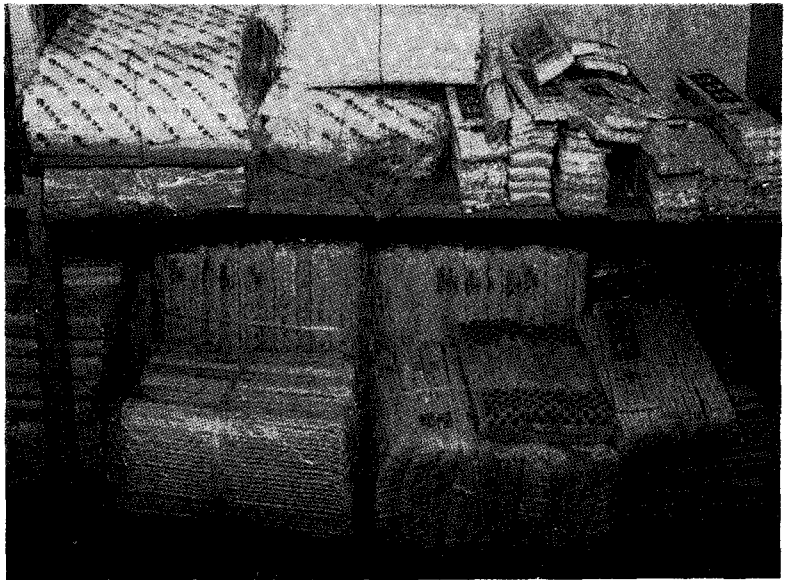
생태계관련 보도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동계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덕유산 생태계 파괴, 남대천 상위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등이 부각됐을 정도이다. 그러나 지자체 실시이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는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관련기사가 줄어든 것은 현지 사정에 밝은 지방주재기자들의 기사화가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폐기물관련 보도는 환경처 정책을 홍보하는 「쓰레기 종량제」기사가 가장 많았다. 이는 환경기자들이 현장 취재보다는 환경처 보도 자료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쓰레기 종량제가 시범실시되는 지역을 취재한 기자들은 모두 종량제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런데 환경처 보도자료는 종량제가 정착되고 있다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김포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부조리는 심각한 지경이라는 대외비성 보고가 들어오고 있으나 이에대한 환경처 보도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또 현장을 취재한 기사도 몇 건에 지나지 않았다. 환경처 자료에 의존해 작성한 기사보다 현장에서 취재한 기사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교훈이 올해 쓰레기관련 기사에서 증명된 것이다.

해외환경기사 비중 낮아졌다

또 환경연합, 경실련 등 민간환경단체가 기업의 돈을 받아 일부 환경행사를 치르고 지하수 보존협회가 기업의 돈으로 창설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것은 민간환경운동의 전개방향에 대해 개선돼야할 부분이 있다는데 환경기자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해외환경기사는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지난해는 그린라운드 부각에 따른 지구환경보도가 많았으나 이미 그린라운드의 실상이 대부분 벗겨졌기 때문에 새로운 현안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3월에는 기후



변화협약, 5월에는 바젤협약이 국내에 발효됐으나 이로인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대책을 다루는 기사는 적었다.

대표적인 오보 사례로는 「백화점, 음식점, 목욕,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하지 못한다」「식당에서 나무이쑤시개 사용 못한다」「대형 음식점 음식물 퇴비화시설 의무화」「오존경보제 실시, 심할 때 차량운행 제한」 등이다.

기사 키우기 위한 오보사례

1회용품사용은 희망자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이 가능하며, 나무이쑤시개 사용금지 권장사항이다. 퇴비화시설 설치 시범시행되고 있는 정도이다. 오존경보제는 오존이 심하니까 예약자는 출입을 삼가고 배출업소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달라는 안내 차원이자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다.

**김포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의 부조리는
심각한 지경이라는
대외비성 보고가 들어오고
있으나 이에대한 환경처
보도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또 현장을 취재한
기사도 몇 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오보는 환경처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면서 확정된 것처럼 단독으로 보도자료를 냈거나, 기사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의 말을 듣고 기사화한 경우, 기사가 기사를 키우기 위해 비약시켰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K>